

특집 I / 실행이사들에게 듣는다 ②

獸醫界도 時流에 따라야 한다

신 광 순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세계화 선언 등 대내외적 여건이 달라지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적인 무한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 정세도 이에 걸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우리 수의제도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으며, 그 흐름에 뒤쳐서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나 자문해 본다. 그러면 수의제가 변화되어야 할 당면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할 때가 왔다고 여겨지기에 감히 몇가지 제언을 드릴까 한다.

첫째, 수의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능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즉, 수의·축산시책의 대전환이 정부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한다. 과거 축산의 양적성장 위주의 시책에서 축산물의 질적보장과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축산 선진국들의 행정시책 방향을 보면 생산은 민간주도 형태로 이끌어 가게끔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그 본연의 기능이 되고 있으며, 가축의 질병관리와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규제행정이 시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변혁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 농림수산부에서는 미국 농림성 산하의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s(FSIS, 식품안전

성 및 검사 관리청)와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축산식품 위생관리기관을 행정개혁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다. 즉, 현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을 흡수 발전시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통합된 축산물 안전성 및 검사기구를 새로이 발족시킬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 시책변화가 올 때만이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무의 이관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본다.

둘째,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국가시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가축전염병 관리는 물론 신생 외래전염병의 유입은 바로 우리나라 축산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 총생산고의 20%인 1조원 정도가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임이 선진국의 예에서 밝혀졌는데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즉, 1조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2,000억의 투자를 하여 8,0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원리를 의면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부시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전염병 관리의 기본인 강력한 방역행정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해외유입 신종 가축전염병 관리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각종 질병관리에 국가가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쯤 반성할 때가 왔다고

* 본회 이사, 법제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수의대 교수

본다. 다행히 수의과학연구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립동물검역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시책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제가 아니라 발생후 조치하는 경향으로 역학적인 질병관리 원칙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고품질이면서 위생적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즉, 아무리 품질 좋고 신도불이의 축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고 기피한다면 이는 백년 하청의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인 축산식품은 국민보건차원에서 볼 때 영양적인 우수성은 물론이고 식중독 등 위생적인 위해성이 보장된 신선한 식품이어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특히 WTO 체제의 시작은 막대한 분량의 우수 축산물의 수입이 전제되어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냉장육 도입이 전면 개방된다면 이들 수입육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축산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다음으로 기대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유통기한 연장 등 무역압력을 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본다.

다행히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에 대처한 조치들을 뒤늦게 남아 시행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축산물 처리장(도축 및 도계장)의 현대화 등 시설의 선진화(hardware)는 물론이고 운영의 선진화(software)를 이룩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즉, 식육류의 등급제와 유통 판매단계의 정비 등도 중요하지만 도축 처리과정에서의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획기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진국에서 새로운 제도로 채택 시행단계에 있는 HACCP제도(Hazard Anan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위해물질분석 중점관리기준)를 우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앞으로 소비시장의 바램은 식중독세균 등 위해미생물의 오염이 없고 화학적 약물의 잔류가 없는 축산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그 좋은 사례가 저간의 탄저균 사건에서 증명되었다고 한다.

네째, 수의학의 교육제도와 연구풍토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원래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교육이어야 그 교육효과는 배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국의 10개 대학에서 매년 400~500명의 수의사를 배출하는 양적성장은 이룩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족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다행히 6년제 연장안이 가시화되어 있고, 근래 법학·의학·약학 교육제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터라 이러한 기회를 슬기롭게 대처할 때 우리 수의학 교육의 숙원이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추진과 실천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그 좋은 예가 6년제 수의학 교육연한 연장에 대한 건의가 이미 5년전에 문교부(현 교육부)에 접수되었는데도 계속 연구검토만 하고 있지 별로 추진된 일이 없으니 과연 누가 어떻게 언제 실천에 옮겨 말로만 앉아서 주장하는 제도개선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 교육지도자의 미온적 태도가 변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또한 수의학연구의 선진화가 이룩되어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연구풍토가 조성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써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직역이 될 것이다.

끝으로 수의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있듯이 각 직분에 따른 자기개발은 물론 수의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다같이 힘쓸 때 우리도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